

# 與 3명 더 이탈 땀 방어선 붕괴... 탄핵 이번주 최대 분수령

### 김상욱·조경태 이어 김재섭 “14일 찬성표 던지겠다” 선회 국힘 내부 분열 양상... 지지율 박빙 지역구 의원 이탈 가능성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여권 내에서 찬성 의견을 내비친 의원은 11일 현재 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이탈표 8명이면 탄핵 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추가로 3명만 찬성하면 오는 14일 국회 표결에서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을 제외하고 탄핵을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 8명’을 채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등의 조치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면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뉘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흑독한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넌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하면 가결되는 구조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걸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현재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전날에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조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추가 입장 선회로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도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추가로 국민의힘 의원 3명만 마음을 돌려도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중 본선 경쟁이 치열해 지난 총선에서 근소한 득표수로 당선된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예측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호처에 막힌 ‘대통령실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對 검찰... 수사권 경쟁

### ‘공조수사본부’ 출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하지만 검찰·군검찰이 공조수사본부에 아직 합류하지 않아 당분간 수사권의 경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 상설특검의결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진상규명과 수사에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

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경찰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각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혼란이 빚어졌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태욱 등의 자료는 경찰이 확보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했고, 여인형 전 법집사령관의 경우 경찰이 소환을 검토하는 사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두 청장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에 맞춰 일선 경찰에 국회 출입을 통제 명령을 하달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군검찰과 합동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서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광종군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기습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치소서 자해 기도

### 구치소 관계자, 이상행동 제지... 건강엔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구치소에서 고의적 자해를 기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1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전날 밤 11시 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 대기실에서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이 결정되기 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이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이상행동을 하자 통째로 근무자가 바로 출동해 문을 열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바로 포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관리행위 사범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국수본 신청에 법원 ‘尹 혐의 소명’ 판단

### 대통령실 압색영장 발부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강제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11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발부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조건은 범죄혐의가 존재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압수수색을 위한 수색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정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청와대는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위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팀 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품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